

음식점 폐기물 감량 의무화 또 늦춰지나

조레엔 200~330㎡ 업소 내년 1월 자체처리 의무화도, 한차례 연기에도 업계 경영난에 2차 유예 검토 제주시, 설치비 일시지원서 렌탈로 전환해 접수중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일정한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의무화 또 늦춰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곤 하지만 다시 미뤄진다면 당초 올 1월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을 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년 늦췄던 데서 두번째로 미루는 게 된다.

1월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화 대상인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에 대한 의무화 시기를 일정기간 유

예를 검토중이다. 음식점에서 감량기 설치나 자체 위탁처리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감량 의무화는 지난해 10월부터 330㎡ 이상 음식점에서 시행된 데 이어 200㎡ 이상~330㎡ 미만으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도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52.4t(2018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발생량의 25%를 차지하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감량기 설치 의무화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유예를 검토중인 것은 음식점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감량기 설치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감량기 설치 의무화가 예고됐지만 제주시 소재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의 설치율은 550개소 중 58개소로 10% 정도에 그친다. 설치율이 낮은 것은 행정에서 감량기 구입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이 100kg 용량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데다 음식점 내 기기 설치공간 부족과 비싼 전기요금, 애프터서비스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감량기 구입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덜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비의 50% 일시

지원에서 월별 지원하는 리스방식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감량기 렌탈 보급사업에 참여할 제작업체 5곳도 선정했다. 또 시는 리스 전환과 함께 음식점에서 감량기 사용에 따른 월 30만~40만원 정도의 전기료 부담 호소에 전기료도 50%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내년 전면 시행을 위한 행정의 지원예산 확보도 어려워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행정시,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0 제주애 빠지다 ⑱ 서귀포시 대정읍 성서빈씨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성서빈씨.

강다혜기자

“수놓음’으로 공동체 위한 일 하고 싶어요”

대정읍 도시재생지원센터서 주민-행정 가교 역할 ‘톡톡’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공동체의 안전이 나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다. ‘각자도생’을 지양하고 ‘공명지조’를 지향해야 감염병으로부터 끝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도시의 활기를 되찾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일구어 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서빈(38)씨는 지난 2013년 제주에 처음 입도한 뒤 지난해부터 제주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는 2013년 황사로 잦았던 서울 하늘을 뒤로 하고 잠시 제주에 정착했다. 한국어 강사를 하며 2년 쯤 시간이 흐르니 정착지였던 서울이 그리웠고, 서울에서만 향유할 수 있던 문화생활, 동아리, 두고 온 친구들도 보고싶었다. 제주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지내야겠다는 고민을 하다 머나먼 인도에서의 생활을 거쳐 부산, 서울을 지나 다시 제주로 왔다.

인도에서의 경험은 또다시 제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큰 자산이 됐다. 그는 인도에서 그 나라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 채널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경험 등을 살려 제주영상문화진흥원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제주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또 문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대정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때때로 출범을 앞두고 있던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인연이 닿았다. 그가 ‘공동체’와 ‘문화’에 대해 지니고 있는 뜻과 센터가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닿았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낡고 오래된 것을 뜯어내 더 신식으로, 더 새롭게 바꿔낸다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들은 오래된 것의 ‘재발견’과 대정읍만의 자원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이들은 대정읍의 용천수 ‘신영물’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신영물은 모슬포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에 위치해 오래 전부터 ‘신영물’이라 불렸으며 주민들의 식수이자 빨랫물이었다. 이후 도로가 개설·확장되며 현재 원형이 보존돼있진 않지만 주민들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의미있는 지역 자산이다.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 신영물 스토리를 이용해 ‘신영물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주제로 신영물 인근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해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탐방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작년 부터 계획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처음엔 주민협의체가 10여명이었으나 꾸준히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64명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수놓음’이라고 하는 제주의 문화에 녹아든 것 같다”며 “이제 정말 제주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됐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사업을 해내고 싶다”고 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고성리에 우·오수관로 설치 저지대 침수피해 걱정 덜어

성산읍 고성리지역에 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다.

서귀포시는 성산 고성리 저지대 지역의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 오는 4일 준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 태풍·집중호우 시 마다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던 곳이다. 특히 주택 150여동, 도로·농경지 등 20여ha를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아 재산피해·주민불편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의 내습시엔 이 지역 저지대로 빗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주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이 지역에 총 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월부터 배수압거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우수관로·오수관로·상수도관을 매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빗물이 인근 하천(고수천)으로 최종 유출돼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해소와 함께 차량소통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은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통행불편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드린다”고 말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따뜻한 햇살 받으며... 맑은 날씨를 보인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섬지코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안절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한다

32억원 투입 내년 6월 완공 생활체육 강좌 시설 확충

제주시가 시민의 쾌적한 실내 생활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한다.

시는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는 증축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이 내년 6월까지 증축된다. 사진-제주시 제공

공사를 본격 추진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증축공사는 기존의 배드민턴, 농구 등 구기운동 위주의 시설에

서 탈피해 다양한 생활체육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1층(2853㎡)에서 2층(755㎡)을 증축해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의 생활체육 강좌를 위한 실내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엘리베이터를 갖추게 된다.

또 체육관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냉난방 시스템 보강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활동 인프라를 갖추게 돼 시민들이 생활체육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제주4·3 공상족동과 반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4·3사건의 가해자는 남로당제주도당이며 따라서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남로당제주도당**에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정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4·3 범법행위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족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4·3 수형인들은 6·25 한국전쟁으로 재판기록이 소실되는 바람에 현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당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재판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제적인 면에서는 범법행위를 하였던 수형인들에게 공소기각판결과 같은 면죄부를 주고 형사보상을 한 것은 너무나 위법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무부와 법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통해 4·3 가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14억원까지 형사보상을 하고, 형사보상금도 모자라 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까지 검토하게 된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체 거액의 형사 보상 결정을 한 법원과 이에 항고하지 않은 법무부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가수호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공직자들을 규탄하며 두 번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저지시민연대